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23년부터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본 글은 두 기본계획에 따른 유·보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보육 정책 전반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과 같이 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유보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사 지원 체계 개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구조적 과제는 향후 더욱 집중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1 서론

정부의 2026년 영유아특별회계 총액은 9조 2,948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다.¹⁾ 2026년 교육부 총 예산이 약 106조원임을 고려해보면, 0-5세 연령에 대한 국가 예산은 교육부 총 예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자체사업 예산을 추가한다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총 예산은 이전 사례를 근거로 추정컨대, 약 15조 내외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유·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 현황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의 향후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

의하는 것은 최소한 주기적으로 필요한 과업일 것이다.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은 2024년 6월부터 교육부 업무로 일원화되어 재정이나 행정에서 관할 중앙부처의 측면에서는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이 아직은 하나의 설계 속에서 재구조화되어 있지는 못한데 교육체계와 보육체계가 점차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엮어가는 시발점에 서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유보통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정 등 측면에서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정책의 성과 검토는 각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각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해당 분야 중장기 국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각

1) 국회예산정책처(2026). 2026 대한민국 재정.

각에 제시된 정책 사업 항목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23년부터 5개년 동안 계획된 두 유·보 정책 기본계획이 추진 과정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과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평가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향후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성과에 대한 검토는 각 정책 사업의 현황과 정부 정책 자료, 기 발표된 통계 등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 외 공무원 등 유아교육·보육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면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²⁾

2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 기본계획

유보통합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립된 유아교육 및 보육 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들은 상호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만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2)³⁾에 따르면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중심 전략으로 하여 부모급여 도입,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⁴⁾)에서는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 역량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핵심과제로 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유·보·초 연계 내실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본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최대 월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유치원 학비는 5세 및 4세를 대상으로 5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 추진이 지속되고, 유보통합 정책은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의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뉴시스, 2025. 4. 29.)⁵⁾.

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이 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분야 국가책임 강화’를 비전으로 4대 핵심과제 즉,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구체적으로 각 핵심과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핵심과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반영하고 학부모 부담 해소와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다양성 제고를 통해 맞춤형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유아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단설과 같은 수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유아교육기관 신·증설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

2) 본 글의 원천이 되는 정책보고서(김은설 외, 2025. 유아교육·보육 정책 성과와 과제(III))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책 사업 진행 현황이 대부분 ‘25년 시점에서 파악되고 있음.

3)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4) 관계부처 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5) 뉴시스 기사(2025. 4. 29.). 영유아시범학교 145곳 운영...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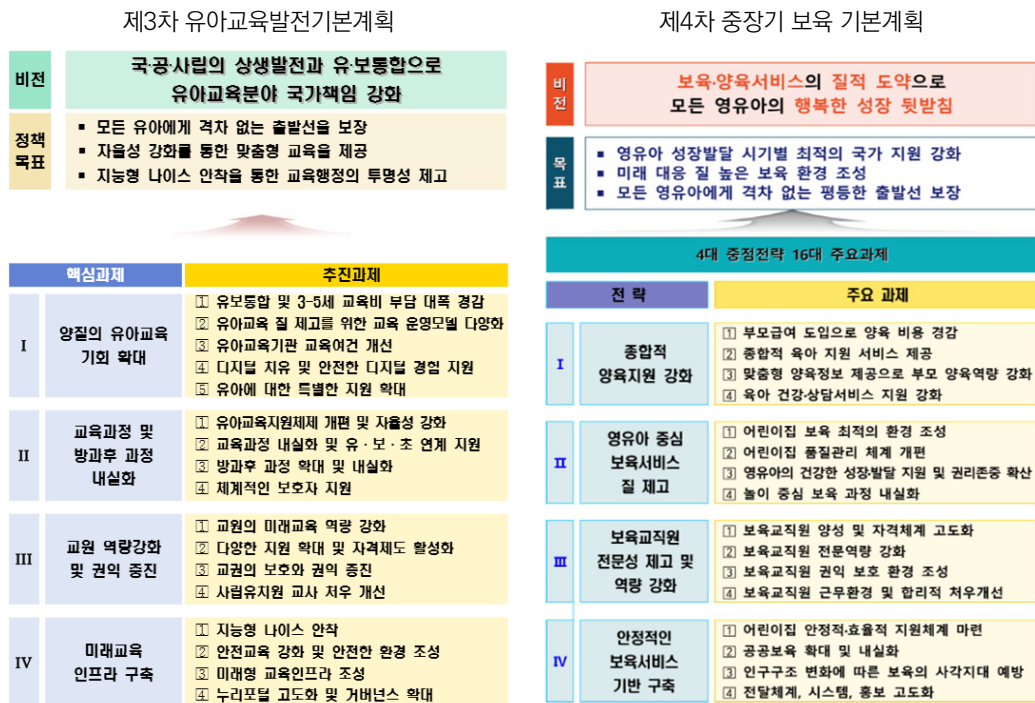
영 내실화'로서,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편과 맞춤형 교육 운영을 추진하고,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안착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3~5세 교육과정 개정,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연계성 강화, 학교급 간 연계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와 유·보·초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과후 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핵심과제 셋째는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으로 교원 정책 분야의 이슈이다.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면서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의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을 확대하고 수석교사 배치 및 지원, 교권보호 및 권익 증진 지원체계 마련, 마음 건강 상담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게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핵심과제를 보면, 유치원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적용과 안착을 추진하고 회계 및 입학 등 정보화 강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고도화,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추진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 9.;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p. 11.

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2)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두고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중점 전략 I 인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부모급여로써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육비용 경감을 추진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가정 내 아이돌봄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양육지원기관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점 전략 II로 제시된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취약 아동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 및 재구조화,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간소화 등을 통한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과정적 질을 중심으로 하도록 어린이집 평가제를 개편하고 현장 중심 자율적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품질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중점 전략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로, 보육교직원 양성과 자격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격을 양성 인정 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3급 자격을 폐지하며 ‘원감’직을 신설하여 직위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

화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교과목을 개편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며 수요자 중심 보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네 번째 중점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고도화 및 비용지원체계 정비, 규제 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 향상, 민간과 국공립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는 공공보육 개념 재정립,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공공보육 확대와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보육 취약지역을 지정,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보육 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 지원, 어린이집 휴·폐원 등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3 정책 추진 성과 분석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자체 자료⁶⁾와 관련 통계⁷⁾, 관계자 면담⁸⁾, 정책수행에 대한 인식과 의견조사⁹⁾, 전문가 조사¹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¹¹⁾.

가. 유아교육 정책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표 1〉 참조), 유아교육 정책 중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6) 교육부(2025).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회의자료; 교육부(2025). 유아학비 지원계획.

7) 최효미 외(202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8) 면담은 학부모, 유보기관 원장 및 교사, 담당 공무원 등 총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9) 설문조사에는 0-5세 영유아 부모 1,001명, 유치원 원장 및 교사 730명,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813명 등 총 2,544명이 참여함.

10)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전공 대학교수 21명이 조사에 참여함.

11) 해당 분석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김은설 외(2025).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III).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확대’,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교사 역량 강화’,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성과가 높은 정책 과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시점에서 4, 5세에 대한 추가 교육비 지원을 통해 부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성과가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방과후 과정 확대와 내실화는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문화, 외국인 유아 등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상향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원장과 교사의 성과 인식이 높았다.

반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정책으로는 ‘유아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교권의 보호와 권익증진’ 등의 추진과제가 꼽히고 있다. 유아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은 일부 해당하는 유치원에서만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 이어서 전반적인 성과 평가가 낮게 분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정책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성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운영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홍보 자료 등의 활용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은 현 시점에서 아직은 추진이 부족하지만 기본계획의 남은 기간 동안 진행이 집중될 사안들인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원장과 교사가 이에 대해 가진 기대에 비해 성과가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과에 대한 낮은 만족 정도를 표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 과제 추진에 있어 전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첫째,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과 성과 인식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차이가 크고 정책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립 우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립에 대한 적용 및 관리 측면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 교사의 성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사 업무의 효율화에 효과가 있는 지능형 나이스의 안착도 사립유치원에서는 실행이 되기 힘든 조건임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가진 정책으로 보고하고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직접 대상이 되는 편에서는 이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성과에 대해 작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립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정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익히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고 정부 또한 실제 처우개선비를 높였으며 기본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사립교사는 여전히 성과에 대한 인식이 낮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낮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정부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고 이를 해당 수요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장의 성과 검토에서 나타난 추진이 미흡하고 이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난 과제들의 실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대적·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정책 즉, 디지털 이용 관련 지원,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 개선에 대한 가속력 있는 추진이 필요하고, 보호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화할 필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교권의 보호와 증진, 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이 신속히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로 부각되었다.

나. 영유아 보육 정책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표 2〉 참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정책은 부모급여,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발달 지원 서비스 등 전반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정책 인지와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특히 부모급여는 제도 시행 2년 차에 수혜 대상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고, 지급액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었다. 시간제

보육은 통합반 도입과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제공기관 수가 확대(827개소→1,675개소)되며 제도적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와 감면 확대를 통해 이용 범위를 넓혔으며,

〈표 1〉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정책 추진과제별 성과 분석

핵심과제	추진과제	성과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성과 인식 조사 결과 (5점 척도)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1.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시범사업 부모만족도 4.48점 • 교육비 금액 연도별 감소	3.6~3.7점 (성과 평가 인식 높음)
	유보통합	• 전반적 유보통합 추진 불충분	2.8~3.0점
	2.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지원’ 사업 수행 • 8개 광역-기초 지자체	3.3~3.4점
	3. 유아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	• 소규모병설 통합 운영 부모 만족도 상향 • 신규택지지역 공립단설, 병설39개 신설 •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 확산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사립유치원 폐원 개선 성과 미흡 (2.9 최저)	2.9~3.5점
	4.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 유아 과의존·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미흡 • 유아 디지털 역량 지원 시범 기관 운영	3.3~3.6점
	5.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접근성 제고 • 특수학급신증설(특수학급설치율13.3%) • 유치원 다문화학급 설치증가(신설13개) • 외국국적유아 학비, 급식비 지원 확대	3.5~3.8점 (학부모만족도 3.5점) (최고점 성과)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1.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	•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시간 조정 미실행	3.5~3.7점
	2.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지원	• 누리과정 안착 지원: 다양한 모델 발굴 • 유보통합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개정 •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1,091개원(학부모만족도 92.2%)	3.6~4.0점
	3.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확대(1일 9시간 이상 운영 비율 72%) •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 담당 컨설턴트 양성	-성과3.8~4.1점 (원장) - 부모만족도3.8점 (맞벌이 높음) 최고 성과 평가
	4.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 보호자 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유아교육 홍보 자료 등 제작, 배포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상담 체계 미진행 • 누리과정 포털을 활용한 부모교육 제공	3.2~3.7점

핵심과제	추진과제	성과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성과 인식 조사 결과 (5점 척도)
Ⅲ. 교원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	1.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 누리과정 심화 연수 2,500명 •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 사립 교원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미흡	성과 3.3~3.7점
	2.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	• 다양한 지원, 대체교사 지원 미흡 • 유보통합 추진 연계로 인한 성과 미흡	2.9~3.6점
	3. 교권의 보호와 권익증진	• 교사 교권보호 관련 법령 개정 • 교원 마음건강 지원 확대 미흡 •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 미흡	3.1~3.3점
	4.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상향 • 유치원 규칙 내 봉급기준 기재 88%	사립 교사 3.0
Ⅳ.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1. 지능형 나이스 안착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적용, 안착 지원 • 사립표준유아교육비 7.7% 인상 • 정보화 기반 강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지침 개선 등 성과 미흡	3.4~3.7점 (공-사립 간 성과 인식 차이 큼)
	2.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유아생존수영 14개 교육청 18,749명 참여. 학부모 만족도 96.5% • 안심 환경 조성, 안전교육 94.9% 만족 •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마련 • 국공립 유치원 방학 중 급식 운영 개선, 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성과 미흡	성과점수 3.4~4.1점
	3.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	• 2025년 이후 추진. 미검토 대상 과제	3.6점
	4.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	• 콘텐츠 개발, 탑재. 활용성 강화(접속건수증가('23 389만 건→'24 452만건)) • 교사 연수 기능 확대 • 지원 조직 체계 개편은 미 실시	3.3~3.7점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로 이용자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종합적 양육 지원 체계의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면담 결과, 발달 검사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기관 접근과 교통, 돌봄 인력 매칭 등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지원의 질적 확장을 위해 정보 접근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보육서비스 내용의 질적 관리에 있어서는 정책 인지 및 실행률, 그리고 성과 인식에 있어 긍정적으로 나타나 정책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설이나 물리적 기반 마련과 관련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현장의 낮은 체감도를 보이며 불균형이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 인권이나 보육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

게 나타나, 보육의 질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인되었다. 미흡한 과제로는 인적, 물리적 환경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전체 과제 중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어린이집 공간구성 개선 및 재구조화’, ‘노후환경 개선’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정책은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취약 보육 분야의 실질적인 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전문성 강화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주요 성과로도 인식되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담임 교사 지원 정책은 성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향후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대체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조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확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 과중 상황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한편 원장들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을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41.0%)로 인식했으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지원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은 실행/경험 비율(원장 54.4%, 교사 55.0%)과 성과 인식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률과 체감 성과가 가장 낮아, 홍보 강화 및 정책 전달

〈표 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별 성과 분석

중점 전략	주요 과제	성과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성과 인식 조사 결과 (5점 척도)
1.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수혜 대상 전년 대비 46% 증가, 제도 안착	부모만족도 3.8점/5점
		0세 월 100만원 지급 양육비 부담 경감	0세 부모만족도 4.0점
	2.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통합반 도입 및 설치기준 완화로 시간제보육 기관 수 2배 확대 ('23: 827개소 → '24: 1,675개소)	부모 만족도 높음 3.7점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수 지속 증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점진적 확산	2세아 부모 만족도 4.1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인력 확충, 연 12만 가구 지원 기반 마련 ('23: 8.6만 → '25: 12만 가구)	부모만족도 3.4점
	3.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강화	접근성 낮은 지역 중심 ‘육아침표 어린이집’ 확대(2023년 50개소 → 2024년 87개소), 협력형 운영방식 도입	부모만족도 3.6점
		공통 부모교육 교과목 개정 및 강사 교육 실시(연 4회, 총 1,428명 참여), 강사용 매뉴얼 개발	
		e-러닝·유튜브 등 온라인 부모교육 콘텐츠 74종 개발, 누적 조회수 약 30만 회(2024년 기준)	
	4.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105개소에서 연 10만 건 이상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277개 기관과 연계	부모만족도 3.3점
		정서·사회성 검진 확대(2회→4회), 상담센터 71개소 운영, 보건소 68개소로 확대	

중점 전략	주요 과제	성과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성과 인식 조사 결과 (5점 척도)
Ⅱ.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조성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0세반 1:2, 3~5세반 1:8, 영아반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배치 시범적용 중	(이하 성과 점수) 3.1~3.4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76억 원(852개소)에 지원(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노후환경개선비 명목 저리 융자금 5.6억원 지원(21개소), 급식위생관리 관련 필요경비 98억 원 지원(5,800개소)	
	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평가제 개편: 2024년 7월 개편 완료/시행 구조적 질 평가지표 축소,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현장평가 완료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결과 99.4%가 '만족')	3.7~4.1점 (평가제 개편 성과 인식 우수)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보육교직원 대상 11종 안전교육에 17.5만 명 참여,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3.5~4.2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015년 대비 약 1.9배 확대(899개소 → 1,718개소), 통합보육 기반 강화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교직원 대응 역량 제고	
Ⅲ. 보육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및 해설서, 실행자료 등 4종의 현장지원자료 개발·보급 모든 영아(장애영아, 장애위험 영아, 이주배경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의 영아 보육 내실화	3.4~4.0점
		보육교직원 연수 및 장애아 보육 매뉴얼 배포로 현장 실행력 및 전문성 제고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 개발	
	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유보통합과 연결하여 통합교원 양성 방안 개발 중 상시 보조·연장·대체교사 확대	3.6점
	2.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수교육기관 평가 개선: 의견 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보완(신설 1개, 수정보완 16개)	3.6~3.7점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조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 및 범위·방법 명확화,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로 교사 권익 보호	3.5~3.6점
		보육교직원 대상 마음성장 프로그램 운영('24: 37,820 수료), 영유아교사 맞춤형 심리건강 검사도구 개발 완료	
	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대체교사 계속 지원: 육아중 소속 대체교사 수 확충('23: 2,200명→'24 2,477명) 비담임교사('23: 12개 시도 273명→'24: 13개 시도 339명), 보조연장교사('23: 57,433명→'24: 57,477명)	3.5~3.7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 담임교사, 일부 연장보육 전담교사 → 전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중점 전략	주요 과제	성과	
		문헌 자료 분석 결과	성과 인식 조사 결과 (5점 척도)
IV.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1. 어린이집 안정적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표준보육비용 전년대비 평균 3.5% 인상(0세반 기준 '23: 120.9만원 → '24: 125.3만원)	3.2~3.3점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하여 어린이집 영아반 접근성 개선: 0세반 미개설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비율 감소 ('23:34.3%→'24: 30.2%)	
		교육·보육 관리체계 교육부로 일원화('24.6월), 중앙부처 재정 이관(5.3조원)	
	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어린이집 369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1.1%, 공공보육 이용률 43.0% 달성	3.3~3.5점
		공공형 어린이집 연차별, 직급별 교육, 특강, 운영관리 컨설팅 통해 운영역량 강화: 컨설팅 2,045회, 6,252명 수강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예방	시간연장형 보육: 7,739개소에서 21,186명 이용, 야간·24시간·휴일보육 운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 가정 지원	3.2~3.3점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지원연령 확대(초4까지), 운영기간 연장(최대 10개월), 단가 인상(급간식비 등), 운영기관 150개소로 확대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 기준 정밀화(현원 3~10명), 청년농촌보금자리 연계, 지원기관 100개소로 확대(전년 대비 약 40% 증가)	
		찾아가는 돌봄교실: 교재·프로그램 예산 전환 허용으로 운영 유연성 확보, 돌봄시설 미설치 지역 돌봄 공백 해소	
		농어촌 보육 인프라 개선 필요성 부각: 국공립 비중 21.3%로 낮고, 미설치 지역 543개소로 사각지대 여전	
	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지원기관 기능 강화: 한국보육진흥원은 품질관리·보수교육 수행, 중앙/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보급·현장 지원	-
		통합체계 기반 마련: 정보 제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현장 컨설팅 강화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지도 및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한편 취약 지역 및 기관 재직 교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수혜자 입장에서는 관련 정책 효과가 높게 나타나나, 그렇지 않은 대도시 지역이나 대규

모 기관의 교사는 미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 임금 체계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정책은 지원체계 정비와 공공보육 내실화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

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비계측연도임에도 표준보육비용을 3.5% 인상하고,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 도입으로 0세반 미개설 비율을 34.3%→30.2%로 감소시켰으며, 토요보육수당(일 5.8만원)을 신설해 영아보육 여건 개선과 취약시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준 개편, 현장 컨설팅 등은 공공보육 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농어촌 및 읍면 지역에서의 의료, 발달 지원 인프라 부족이 주요 제약으로 지적되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점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교사 역량 강화 및 공공보육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

4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유아교육 정책

1)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 정책

첫째, 유보통합의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부모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지도는 85%에 이르고 14.4%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기준 3.6점 수준으로 유보통합을 통한 질 제고 효과에 대한 기대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부모의 사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보통합에 대해 정밀하게 추진의 방향성,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범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키워서 현실에 도입하고 정착하게 하는 절차를 신속히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 비용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만족도, 성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 무상교육·보육 추진의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3~5세 교육비 추가 지원, 그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주어지는 사립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경감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이루어지고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다. 어떤 정책보다 비용 감소에 대한 부모의 체감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비용 지원이 저출생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셋째,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고 나아가 여전히 수요가 많은 특수교육대상 선정의 폭을 넓혀서 발달지연 아동까지 영유아 전체 대상으로 유아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유아, 외국인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의 성과를 크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유아교육 발전의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구 감소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이 매우 고무적이고 성과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계속 강화와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즉,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 개선을 위한 연계, 통합 등의 적용, 방과후 돌봄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은 현실적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타개해 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층 더 성과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와 검토, 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하다. 정책 사업의 성과를 장기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서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교육의 다양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보다 다방향적인 접근의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2) 교육과정 정책

교육과정 정책은 정부의 체계적인 실행 노력으로 누리과정 안착지원, 유·초 이음교육 강화, 영아 교육과정 개정 등 지난 2~3년간 성취한 내용이 상당히

며 자체 성과에 대해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방과후 과정 확대와 내실화는 유치원 교원이나 학부모에게서도 성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유치원에 대한 돌봄 연장 수요는 부모 맞춤으로 대응되고 있고 다양하게 방과후 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 지원 강화 정책은 정부가 제공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체감도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간극 발생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부모교육이 수요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단계이다.

3) 교원지원 정책

첫째, 사립교육에 대한 연수 강화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먼저 교원 역량 연수와 관련된 분석을 보면, 교사 미래교육 역량 강화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성과가 높게 인식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연수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유보통합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연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한 것도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연수가 여전히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를 성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사립유치원 교사는 연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대체교사 증원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체감될 수 있는 연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대책도 더 강화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섬세한 계획 추진이 요구된다. 교

사 권리 보장 강화 등은 이러한 마음 건강 지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선에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여 같이 강화,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 사립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상향 정책은 성과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교사로부터 매우 미흡한 정책이기도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즉, 지원 비용이 상향된 점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또 다른 불이익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기관 간 기본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의 정책 실행 계획을 보면, ‘누리과정 포털’을 활용하여 교사, 부모 등 모든 수요자에 다양한 교육, 지원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사안들을 연결 짓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은 균질된 수준의 교육을 최대한의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제대로 된 활용은 매우 긍정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포털 자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더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면담에서, 그들은 누리과정 포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i-누리(누리과정 포털) 자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둘째, 안전교육과 환경조성의 성과에 대한 유치원 교원,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응답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 자체 성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의 인식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성과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과제에 대해 파악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립은 교원보호와 권익 증진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차이나는 성과 평가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아나이스 사업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은 전수가 나이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과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원장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과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관 유형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왜 다른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나. 보육 정책

1)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과 달리 영아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육 정책 계획의 하나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 평가가 낮았는데 이용 시간이나 비용 지원에 대한 확대 요구가 많았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부모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는 무엇보다 부모급여라는 현금의 직접 지원이 가진 높은 체감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활발하게 정책 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도 양육 지원의 큰 축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달검사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지역 간 이용 격차로 인한 접근성 미흡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중

보육서비스 내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정책들은 성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물리적 공간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폐원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교사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연령별 단계적 확대 적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해 성과 인식이 높고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80~90%의 원장이 개편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고 이러한 개선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평가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비 과정을 거친 상태의 어린이집에 대해 더욱 필요한 지원이 되는 성과가 있다.

영유아의 안전과 권리 보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장의 성과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중장기 계획에서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수교육 교과목 개편이나 관리체계 효율화 등 주로 교사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가도록 할 수 있기보다 거시적인 외부제도, 체계, 프레임의 구조 개선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보육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있을 때 구성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치중된 계획이라는 인상이 있다. 유아교육 정책과 비교해 보면, 보육 정책에 비해 유아교육 정책은 동일한 역량 강화라는 주

제 아래 컨설팅 지원, 학습공동체 강화,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교사에게 역량이 불어 넣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나타나 는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가 보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으므로, 이전에 구조화된 보수교육과 관리체계에 덧붙여 보육교사에게도 학습공동체 속에서 역량을 키우고 보다 컨설팅이 풍부하게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4)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보육 정책 속에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 각지대 예방을 위한 과제들은 앞서 유아교육 정책에서 언급한 관련 과제의 성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지원 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의 활용, 영 유아 심리사회 발달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유아교육 체계가 갖고 있지 못한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 정책에서는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서비스 기반과 유아교육 체계 간 공통적인 부분, 보완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추출하고 재조직화하여 가장 포괄적이면서 기능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이 수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과제

가. 지역 간 격차 완화

조사 과정에서,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이나 지자체 지원의 차이에 대해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자체의 재정 현황이나 인구, 지

리적 특성 등 차이에 따라서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하기가 쉽지 않지만, 중앙의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때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살펴,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해당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대해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아동의 정서·행동·심리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발달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의 발달센터 등에서 심리·발달 검사를 폭넓게 진행하고 필요시 요구되는 상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본 연구의 성과 분석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이용에 격차가 있음을 아쉬워하는 의견이 부모 면담에서 나왔고 성과분석에서도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요구가 큰 만큼 이에 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발달 지원 전문 인력, 발달 관련 상담 및 치료 전문가들의 수를 확충하여 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과 적절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방문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교사들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아동 발달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동발달센터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또한 발달 지원의 지역 격차를 줄일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2) 돌봄서비스 이용의 편차 완화

지역 간 서비스 차이 중 시간제보육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격차를 느낀다는 의견이 다

수 있었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가까이에서 이용하기에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가능 연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시간제보육이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보육 서비스이지만, 주로 어린이집에서 통합모델을 통해 정원이 빈 자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 가능 연령의 확대도 고려해볼 지점이 있다. 상황에 따라 유아의 시간제보육을 열어주고 대신 이용 비용에서 영아와는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이며, 농어촌 등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부모의 근로형태 특징에 따라 돌봄 이용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할 때 시간제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균형이 없는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 면담에 의하면, 가정양육지원의 대표 제도인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지역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충분한 돌봄비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²⁾. 그러므로 지역 내에서 아이돌봄비 이용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깊게 검토하고, 더 많은 홍보와 타 지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근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활용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자체 노력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나. 사회·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유아교육 및 보육 기본계획 상 정책 사업들의 이행에 대한 성과 분석을 큰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시대적 변화와 인구 구성 변동에 따른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그 변화의 속도를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 계

획이 수립되던 2022년에 비해 2025년 현재는 디지털과 AI의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적 감소와 규모의 축소는 예상 가능성이 높았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의 과정과 유·보 기관 운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안전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미래교육의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는 이제 교육의 장에서 부차적인 일부 수단이 아니라 주요한 중심적 교육 도구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기본계획에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미래형 교육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해당 과제들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 조사를 보면 “유아기 디지털 교육 로드맵 마련, 교사 미래교육 교직원리에 인공지능 관련 부분 추가, AI-디지털 시대 유아교육 방향성 구체화”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아교육·보육에서 디지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I시대 유아기의 안전한 디지털 교육을 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기 디지털 교육 전문가 위원회’ 등 집중 논의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영유아의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인공지능 관련 교직원리’ 등 디지털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 또한 제고될 수 있

12) 김은설 외(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2)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유·보 기관의 운영 개선

유아교육 기본계획에서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은 정부의 노력 측면에서의 성과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명 이하 소수 아동들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적 환경이 가장 ‘양질의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소규모 유치원 등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통폐합을 진행하기도 한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초소형 유치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고 한편으로는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방식을 모색하여 기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기관 간 통폐합을 진행하게 될 때 면밀한 계획과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진행을 하고, 초소형을 유지하면서 연계를 통해 교육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예를 들면, 차량의 운행, 교사의 증원, 공동 시설의 개량 등) 확보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다문화 환경에 대한 교육적 대응 강화

다문화 배경 영유아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미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서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부족하여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다문화 아동 자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다문화교육의 방법에 대한 논의 요구되고 있다.

관련 정책 계획 이행 성과에서는 정부 자체 성과 보고나 유치원 등 원장, 교사의 평가에서도 다문화 등 취약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분야 정책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섬세히 설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사에 대한 다문화 역량 연수를 확대하여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다문화 아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이들을 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아동 지원과 교사의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이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다.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

의견 조사와 면담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 그리고 부모들은 무엇보다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질 제고, 유보 환경의 상향 등 기대치는 높는데 비해 가시적 정책 이행은 미미함에 대해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유보통합의 효과적·효율적 추진

시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육·보육 질 제고의 과제들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개선, 유보 기관 운영 시간의 개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사 역량 강화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향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유·보 기관에 정착되고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행정·재정적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근거 법률의 마련,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에 대한 기준 확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 혹은 다양성을 고려한 방식에서의 운영 방식 마련 등 현장 차원에서 실질적 통합이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동을 취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개선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무상교육·보육의 범위, 한계에 대한 고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무상교육·보육’의 범위에 대해 전문가 및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에서의 무상교육·보육 수준과 비용 규모,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논의기구 설치,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한 전문적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의 재편

유아교육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지원기관 즉,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의 복지 전달체계에 속하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업무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력의 활용, 교사 부재에 따른 대체교사의 이용,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등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간 교육청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원센터, 전달체계의 기능을 해왔던 기관이므로, 교육청에서 이들 기관과의 관계, 유아교육진흥원을 포함하여 유관 기관의 기능에 따른 효과적 재편의 과정이 필요하다.

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제도 강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하고 정부가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이러한 요구는 전문가들의 제안에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 3년 간 정책의 성과에 대한 검토에서도 교사와 원장 등 현장 관계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보육 기본정책에서는 ‘육아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를 채택하고 발달단계별 검사, 상담, 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해당 정책에 대한 성과도 적정한 것으로 교사와 원장 등이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 기본계획에서는 건강검진 발달 평가에서 선별된 아동에 대해 유아교육진흥원 연계 상담 지원, 경계선지능 유아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의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이 아직은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진행에서 도출되는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누적되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1) 유·보 기관에서의 발달 지원을 위한 교사 지원

교사들이 학급에서 장애위험이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을 교육하고 돌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부모 면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나 교육 가이드북이 있었으면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영유아기에 다양한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방식에 대해 부모들이 동의하면서도 어려움을 가진 아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전체 아동들에 대한 교육·보육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

이다. 장애위험, 경계선 혹은 심리·정서·사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있는 교실에 대해서는 그러한 아동이 1명만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 발달 점검, 지원 확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일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립하여 발달 점검과 개입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에 대한 발달 상태 검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후 지원을 위한 전문가를 기관이나 부모와 연결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건강-정서-돌봄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었다.

마. 교사에 대한 지원의 강화

유·보 정책의 성과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적 성과가 있음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개별 교육과 보육이 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개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교육·보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및 보육교직원 간 격차의 완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기회가 주로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는 연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대체교사 증원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체감될 수 있는 연수 정책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사립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 처우개선비 상향 등의 정책은 성과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또한 매우 미흡한 정책이기도 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기간 간 기본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담고 있는 누리과정 포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또한 공립과 사립 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시스템과 정보에 대한 홍보가 사립유치원 교사,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 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으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업무 효율화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보통합의 시점을 맞아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시점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의 기회 균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교사 역량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질적 측면의 상향에 대한 기본적 바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권익 보호 및 권익 증진 체계 마련

정부 국정과제 중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정책의 주요 내용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5)¹³⁾.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영유아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원 못지않게 직무 특성과 기관 실정을 반영해서 민원 대응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¹⁴⁾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성과는 이론 바가 있지만 현실적 적용에서 인지도가 낮고 적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민원 대응 및 재발 방지 등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비담임교사 확충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교사의 수적 확충, 보조교사의 확대, 수업전담을 하는 비담임교사제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 부모 양육 지원

1) 부모교육의 접근성 제고와 내실화

부모 면담 결과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된 집중적 부모교육에의 참여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교육의 필요성, 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컸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본계획 등에서 보면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더 높임과 동시에 질적으로 우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이돌보미 질 향상 등

아이돌보미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부모가 갖는 불만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모 면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질 검증이나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 여성가족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성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영유아를 위한 공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부모가 있었다. 이러한 사안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13) 대한민국 정부(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14)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3